

〈일반논문〉

## 한국 언론의 제1차 영일동맹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대응\*

정 종 원 \*\*

〈목차〉

- I. 서론
- II. 1900년대 초반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론
- III. 영일동맹 체결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
- IV.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론의 전환
- V. 결론

[국문초록]

1902년에 체결된 제1차 영일동맹은 당시 세계 최강국인 영국이 고립외교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중요한 국제정세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한국 언론은 영일동맹에 대해 나름의 해석과 외교론을 전개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090).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개화기 언론의 세계관과 국제정세 인식』,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의 5장 4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양대학교 한국법사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영일동맹 이전 한국 언론 내에는 국제정세 인식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외교론이 존재했다.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이 국제사회를 규율한다고 보았으며, 외교론으로는 비동맹외교론과 삼국제휴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황성신문』은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상태라고 보았으며, 외교론으로는 자강론과 삼국제휴론을 주장하였다. 한국 언론 내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점도 있었으나, 삼국제휴론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등 일정한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일동맹에 대해 언론들은 각기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황성신문』은 영일동맹이 영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며, 영일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군대와 재정을 확충하는 자강에 착수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중국과 한국을 보전하고, 문호개방을 원하는 만국공법체제와 국제공론에 의한 조치이며,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

영일동맹에 대한 언론들의 인식 차이는 영일동맹 이후 전개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외교론에서도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황성신문』은 영일동맹과 그에 맞선 러불동맹이라는 양대 동맹이 출현하여 한국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삼국제휴론보다 자강론을 더 내세우게 되었다. 반면 『제국신문』은 영일동맹 이후 만국공법체제와 국제공론의 흐름이 정해졌다고 판단하고, 한국이 러일 사이의 비동맹이 아니라, 영일동맹에 편승하는 만국공법 외교론을 써야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한국 언론은 1900년대 초반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영일동맹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시대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 □ 주제어

영일동맹, 러불동맹, 제국신문, 황성신문, 삼국제휴론, 비동맹외교론, 중립론

---

## I. 서론

19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중화질서가 붕괴하고, 만국공법 중심의 국제질서로 재편되어 갔다. 한국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지고 온 국제정세의 위기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한국을 멸망으로 이끈 중요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러일전쟁이었다. 그리고 러일전쟁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과 일본이 1902년 1월 30일에 체결한 제1차 영일동맹(이하 ‘영일동맹’)이었다.<sup>1)</sup> 영일동맹은 러일전쟁이 개전할 경우 독일과 프랑스가 참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만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일본이 1904년에 러일전쟁을 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한 것이 바로 영일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중요한 변동이었던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대응은 무엇이였을까. 한국은 일본이 청일전쟁과 함께 경복궁을 침략한 이후 일본의 주도권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아관파천을 통해 일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자, 한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세력균형이 형성되었다.<sup>3)</sup>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1) 영일동맹은 1902년에 처음으로 맺어진 제1차 영일동맹과 1905년에 맺어진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1911년에 맺어진 제3차 영일동맹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러일전쟁 이전에 체결된 제1차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 학계의 주요 연구로는 김상수, 『영국의 고립청산외교: 영일동맹의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2; 김보연,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체결 원인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태준, 「영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29-2, 2008; 김원수, 「영국의 해양 패권과 동아시아 외교 전략의 전환」,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45, 2017 등이 있다.

서 벗어나 경운궁으로 환궁한 이후, 한국에 대한 러일의 간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은 제한적이지만 외교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영일동맹에 대해 자체적인 대응을 시도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sup>4)</sup> 특히 현광호는 한국 정부의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여, 당시 정부 내에서 일본과의 제휴론과 중립화론이 모두 등장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고종이 적극적으로 중립화정책을 추진하였음을 규명했다.<sup>5)</sup>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론에는 의정부 대신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제휴론과 고종 측근 세력을 중심으로 한 중립화론이 있었고, 고종은 후자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의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어떠했을까. 영일동맹이 체결될 당시 발행되고 있었던 언론은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인데, 두 신문의 전반적인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론에 대해서는 일정한 연구성과가 있었다. 먼저 『황성신문』의 국제정세 인식에 대해 강만생은 『황성신문』이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sup>6)</sup> 이어서 최경숙은 『황성신문』이 세계를 약육강식으로 보는 사회진화론에 의거하여 국제사회를 인식했으며, 대응론으로 삼국제휴론을 주장했다고 보았다.<sup>7)</sup> 다음으로, 정낙근은 『제국신문』이 『황성신

3) 구대열, 「러일전쟁」, 『한국사 42: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2003; 최덕규, 「러시아의 대한정책 (1879~1904)」,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4)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현광호, 「대한제국의 중립정책과 중립파의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2000; 현광호, 「대한제국기 집권층의 동북아정세 인식」, 『사학연구』 63, 2001; 현광호,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신서원, 2002; 현광호, 『대한제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선인, 2007.

5) 현광호, 「대한제국의 중립정책과 중립파의 활동」; 현광호, 「대한제국기 집권층의 동북아정세 인식」, 173~174쪽.

6) 강만생, 「황성신문의 현실개혁구상 연구」, 『학림』 9, 1987.

문』과 동일하게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으로 바라보는 사회진화론에 기반하여 제국주의적 질서로 보았다고 평가했다.<sup>8)</sup> 비슷한 맥락에서 안정임은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모두 사회진화론을 통해 국제정세를 인식하여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보았고, 삼국제휴론을 중심으로 대응하려 했다고 보았다.<sup>9)</sup>

이처럼 한국 언론의 1900년대 초반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론인 외교론은 대체로 삼국제휴론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왔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한청일 동양 삼국의 문화적, 지리적, 인종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할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삼국제휴론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기초하여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대응하였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정종원의 연구에 따르면 러일전쟁 발발 이전에 『황성신문』이 삼국제휴론에서 벗어나, 한국이 러일전쟁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 밝혀졌다.<sup>11)</sup> 이는 1900년대 초반에 한국 언론의 외교론이었던 삼국제휴론이 어느 순간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한편, 영일동맹이라는 중요한 외교적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을 최초로 접근했던 안정임은 한국 언론계가 영일동맹을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경계했다고 분석했다.<sup>12)</sup> 이는 『제국

7) 최경숙, 「황성신문 논설에 나타난 시대인식에 관한 연구」, 『고고역사학지』 9, 1993.

8) 정낙근, 「개화지식인의 대외관의 이론적 기초」, 『한국정치학회보』 27, 1993.

9) 안정임, 「대한제국전기 언론계의 대외인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10)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조재곤, 「한말 조선 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휴 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11) 정종원, 「러일전쟁 개전 전후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 69, 2021.

신문』과 『황성신문』이 모두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존 연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종원의 연구에 따르면, 『제국신문』은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이 아니라 만국공법이라는 규율이 존재하는 사회로 인식했으며, 영일동맹을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만주 침략과 한국침략을 저지한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sup>13)</sup> 이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일동맹에 대한 관점이 한국 언론 내에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국 언론 내에 있었던 여러 관점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깊은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안정임과 정종원의 연구는 모두 1900년대 전반기의 다양한 외교현안에 관한 한국 언론의 인식을 분석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개항기에는 정부 중심의 비밀외교가 중심이었으며,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 중심의 비밀외교와 고종 중심의 독재정치는 한국 정부가 사회의 여론과 거리를 두고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의 외교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개항기 연구에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외교사안에 관

12) 안정임은 1901년 8월부터 1902년 8월 사이의 『제국신문』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을 정리했다. 안정임은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영일동맹에 대해 영일양국이 표방한 한청의 독립보전은 한낱 허상에 불과하고, 영일 두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라고 서술하여 『황성신문』의 인식을 사실상 『제국신문』을 포괄하는 한국 언론 전체의 인식으로 보았다. 안정임, 「대한제국전기 언론계의 대외인식 연구」, 25~29쪽.

13) 정종원, 「러일전쟁 이전 『제국신문』에 나타난 국제정세인식의 기반과 전개」, 『한국 근현대사연구』 75, 2015.

한 한국 언론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면이 있다.

그러나 개항기의 외교활동이 비밀외교가 중심이었고, 정치체제가 고종의 독재체제였다고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에 대한 보도를 무시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01년 9월에 만한교환론이 『황성신문』에 게재되자, 고종이 직접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질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한국 언론에 나오는 국제정세 관련 기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sup>14)</sup>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교에 언론을 활용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열강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한국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열강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에 주한 외국공사들은 한국정부가 외교문서를 신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으며,<sup>15)</sup> 주한 일본공사는 한국 외부대신이 자신과의 대화를 『황성신문』에 유출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sup>16)</sup> 이처럼 한국 정부는 언론의 국제정세 보도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한국 정부의 외교활동과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 보도는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론은 한국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한국 사회 전체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그 결과 영일동맹이라는 중요한 외교적 사건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외교론의 전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 언론의 다양한 인식과 이러한

1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6, 1901년 9월 6일, 「滿韓交換의 風說에 관한 件」.

15) 『제국신문』 1898년 10월 12일자, 「일전에 각국 공소들이」.

1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0, 1903년 6월 5일, 「皇城新聞」의 密談揭載에 대한 해명 요구」.

인식이 외교론의 전환으로 이어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sup>17)</sup> 먼저 2장에서는 영일동맹 이전인 1900년대 초반에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론을 검토하여, 한국 언론이 국제정세를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 언론 내의 상반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영일동맹 이후의 국제정세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살피고, 특히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론인 외교론이 전환된 점을 주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언론이 국제사회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었고, 이것이 영일동맹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외교론의 전환으로 이어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1900년대 초반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론

### 1. 『제국신문』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론

상술하였듯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1900년대 초반 한국 언론이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으로 인식했으며, 대응론으로는 주로 삼국제휴론을 선택했다고 보았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황성신문』에는 타당하지만, 『제국신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이라는 문명

17)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될 당시 한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제국신문』과 『황성신문』만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두 신문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였다.

18) 강만생, 「황성신문의 현실개혁구상 연구」; 안정임, 「대한제국전기 언론계의 대외인식 연구」; 정낙근, 「개화지식인의 대외관의 이론적 기초」; 최경숙, 「황성신문 논설에 나타난 시대인식에 관한 연구」.



적 장치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국신문』은 세계를 문명과 야만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서양 문명만이 제대로 된 문명이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서양문명이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야만은 점점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제국신문』의 문명관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었는데, 『제국신문』은 문명이 발달한 결과 국제사회가 만국공법을 따르게 되어 평화를 보전하게 되었다고 인식했다.<sup>19)</sup>

이처럼 『제국신문』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문명화에 의해 만국공법이 국제사회를 통제하는 규율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만국공법은 단지 규율일 뿐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제국신문』은 특정 국가가 만국공법을 어기거나, 타국을 침략할 경우에는 국제공론에 의해 잘못된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훼가출동’시키는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20)</sup> 즉, 『제국신문』은 국제공론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만국공법을 위반한 국가에게 집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만국공법을 실행한다고 인식했다.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이라는 규율이 국제공론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국신문』은 이처럼 국제정치에서 만국공법이 규율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적 지위도 힘이 아닌 만국공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제국신문』은 열강이 한국에 대한 이권침탈을 잠시 그만 둔 이유는 막강한 국가라도 남의 권리를 어찌할 수 없어서이기 때문이지 한국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고 하였다.<sup>21)</sup> 즉,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힘은 군대가 아니라 권리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법에 의해 보장

19) 정종원, 「러일전쟁 이전 『제국신문』에 나타난 국제정세인식의 기반과 전개」, 45~46쪽.

20) 『제국신문』, 1901년 4월 17일자, 「지금 세계만국이 륝츄럴강에」.

21) 『제국신문』, 1898년 11월 8일자, 「나라이 진보 되어」.

되는 권리가 물리적인 힘인 군대보다 한국을 보전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인 물리력이 아닌 공법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상정한 이러한 『제국신문』의 주장은 만국공법이 국제정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국신문』의 이러한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은 당시 국제질서의 실질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화질서에서 만국공법체제(국제법체제)로 전환되었다. 19세기 유럽의 만국공법은 유럽중심주의와 팽창주의적 성격이 강했으며, 유럽의 국가들만이 만국공법의 주체로 인정되었고, 유럽 이외의 국가들은 만국공법체제에서 제한적인 의미의 주체로만 인정되었다.<sup>22)</sup> 그러므로 개항기에 한국이 실제로 경험했던 만국공법체제는 서양국가들에게 유리한 국제질서였고, 만국공법은 서양국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체제를 만국공법이 제대로 작동하여 강대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국제체제로 인식했다. 이것은 당대의 외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제국신문』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당시의 국제정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국제정세 인식에 기반하여 비동맹외교론(非同盟外交論)을 주장하였다. 비동맹외교론이란 만국공법 중심의 국제체제가 한국의 독립을 지켜줄 것이므로 특정 국가와의 동맹을 배척하는 외교론을 가리킨다. 즉, 비동맹외교론의 기본 전제는 열강과의 동맹이 없이도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만국공법과 국제공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국공법체제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제국신문』에는 이러한 믿음이 곳곳에

22) 김용구, 『만국공법』, 소화, 2008, 48~53쪽.

서 드러나고 있었다. 예컨대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을 숭상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개입할 것이기에 만국공법이 무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sup>23)</sup> 또한, 『제국신문』은 영국 같은 강대국이라도 힘에만 근거해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으며, ‘공법경위’, 곧 만국공법의 원리로 나라를 지켜야 국가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24)</sup>

『제국신문』은 이처럼 만국공법이 실제로 작동하여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국신문』은 청, 일본, 러시아에 의지하지 말고 한국의 독립자주를 굳건히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sup>25)</sup> 일본과 러시아 둘 중 어느 쪽에라도 의존하면 두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국가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이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경계한 『제국신문』은 모든 국가에 대해 외교를 공평하고 균일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을 중시하는 국제정세 인식에 의하여 특정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비동맹외교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8)</sup>

23) 『제국신문』, 1902년 6월 30일자, 「알슈업는일」.

24) 『제국신문』, 1902년 6월 30일자, 「알슈업는일」.

25) 『제국신문』, 1898년 11월 2일자, 「이번 종료에 공동회를」.

26) 『제국신문』, 1899년 3월 27일자, 「개화라 허는 말은 충속을 열고」.

27) 『제국신문』, 1899년 12월 18일자, 「나라에서 각국으로 더부러 허는 도리던지」.

28) 기존에는 이러한 태도를 ‘중립외교론’이라고 불러왔으나, 『제국신문』의 주필이었던 이승만이 『제국신문』에 내었던 글을 정리하고 보강하여 낸 저술인 『독립정신』에서 ‘중립국’, 곧 영구중립국을 외교주권의 일부를 포기한 불완전한 국가로 보는 시각을 보이면서 중립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우남 이승만 전집 2: 독립정신(영인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30~31쪽) 실제로 『제국신문』에서는 자신들의 외교론을 설명하면서 ‘중립’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제국신문』의 외교론을 특정국가와의 동맹을 하지 않는 외교론이라는 의미에서 ‘비동맹외교론’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비동맹외교론’이라는 용어는 중립을 비판했던 이승만이 주필인 『제국신문』의 외교론을 분석하는데

『제국신문』의 외교론에서 비동맹외교론이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삼국제휴론을 주장한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제국신문』은 일본이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한국, 청과 연합하여 보전하려고 하니, 한국 정부가 청, 일본과 손을 잡고 함께 맹세해서 ‘보거순치’의 형세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터키가 유럽국가들에 의해 러시아로부터 자국을 유지했듯,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이는 곧 한청일 삼국이 제휴해야 한다는 삼국제휴론이었다. 『제국신문』이 창간되던 시점인 1898년에는 러시아의 한국 간섭이 본격화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독립협회 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진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제국신문』은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삼국제휴론도 선택 가능한 외교론 중에 하나로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국신문』의 국제정세 인식에 의해 견고하게 뒷받침되었던 것은 비동맹외교론이었으며, 삼국제휴론은 비동맹외교론보다 드물게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국신문』의 외교론은 비동맹외교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질 때 삼국제휴론이 등장하는 식으로 두 외교론이 공존하고 있었다.

## 2. 『황성신문』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론

『황성신문』의 국제정세 인식은 『제국신문』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황성신문』은 『제국신문』과 달리 서양의 문명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시의 국제정세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이는 『황성신문』이 당시 국제정세를 ‘전국(戰國)시대’에 비견한 데서 알 수 있다. 예컨대 『황성신문』

한정한 용어이며, 동시대 한국 정부의 중립외교론을 포괄하는 용어가 아님을 밝혀둔다.

29) 『제국신문』, 1899년 1월 31일자, 「슬프다 아라스가 여순구를 응거하매」.

은 1898년 11월 25일자 논설에서 당시의 국제사회는 전국(戰國)시대와 같다고 하면서, 약육강식의 상황이라 보았다.<sup>30)</sup> 1899년 8월 7일자 논설에서도 역시 당시의 국제정세를 전국(戰國)시대라고 하였다.<sup>31)</sup> 이외에도 당시 세계를 '대전국(大戰國)'으로 보는 기사도 실렸다.<sup>32)</sup> 『황성신문』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전국시대에 빗대어 본 것은 국제정세의 원리가 약육강식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이었다.

국제사회를 냉혹한 약육강식의 장으로 본 『황성신문』은 만국공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황성신문』은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열강이 청에 대해 군대로 위협하고, 공법(公法)으로 한정을 짓고, 약장(約章)으로 책임을 물어서 그 토지를 범한다고 주장했다.<sup>33)</sup> 만국공법과 조약이 서양 열강에 의해 실제로는 침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또 다른 논설에서 『황성신문』은 세계만국이 공법을 성명(聲明)하면서 겉으로는 신의가 있는 듯하지만, 실제 마음은 탐욕스럽게 틈을 엿보다가, 틈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변하여 이익을 탐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예가 베트남, 미얀마,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며, 이것이야말로 약육강식이라고 주장했다.<sup>34)</sup> 『황성신문』은 국제사회가 실제로는 약육강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열강이 겉으로 공법으로 포장하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면 침략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황성신문』의 국제정세 인식이 이처럼 『제국신문』과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황성신문』은 『제국신문』과 다른 외교론을 전개했다. 『황성신문』은 국제사회가 힘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인식했으므로, 한국의 생존을

30) 『황성신문』, 1898년 11월 25일자, 「俄國弭兵會論」.

31) 『황성신문』, 1899년 8월 7일자, 「夫燎原之火는 勢가 一薪에」.

32) 『황성신문』, 1899년 8월 15일자, 「時事新論에 有曰當今天下五大洲諸邦은 一春秋之大戰國이라」.

33) 『황성신문』, 1899년 5월 17일자, 「大凡天下에 有道の 國은」.

34) 『황성신문』, 1900년 8월 17일자, 「堯之犬吠跖」.

위한 해결책도 힘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황성신문』의 주된 외교론은 『제국신문』과 달리 자강론과 삼국제휴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자강론을 살펴보면, 『황성신문』은 세계의 국가들이 강약이 나누어져있는데,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자수자보(自修自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35)</sup> 또한, 『황성신문』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모두 한국에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으니 해결책은 자치(自治)와 자립(自立)에 있다는 주장이 실렸다.<sup>36)</sup> 『황성신문』의 편집진은 어떠한 열강도 믿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약소국인 한국의 생존전략은 자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황성신문』의 또 다른 외교론은 삼국제휴론이었다. 상술하였듯이 『황성신문』은 당시의 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보았다. 그런데 『황성신문』이 인식한 당시 세계의 또 다른 모습은 서양세력이 동양으로 침략하는 서세동점이었다. 『황성신문』은 서양각국이 한 집안처럼 행동하면서 동양을 점거해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삼국이 연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성신문』은 일본에 제언을 하였는데,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한척 양국과 사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양 삼국은 정족(鼎足)과 같아서 세 다리가 서로 도우면 설 수 있으나, 만일 두 다리(한척)가 부러지면 일본 혼자서는 동양을 보전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sup>37)</sup> 『황성신문』은 이후에도 삼국제휴론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주장하였다.<sup>38)</sup>

자강론과 삼국제휴론은 현실의 외교상황에서는 방향성에 차이가 있었

35) 『황성신문』, 1900년 11월 24일자 「兩相論耻(續)」.

36) 『황성신문』, 1903년 8월 27일자, 「孫貞鉉 寄書」.

37) 『황성신문』, 1899년 4월 12일자, 「昔에는 東洋三國이 各其閉關自守호야 幾千年을」.

38) 『황성신문』, 1899년 4월 29일자, 「淸國志士가 日本文을 先學호주는 論說을 略記호노라」; 『황성신문』, 1899년 6월 7일자, 「朝鮮新報對辨論(續)」.

다. 자강론은 한국이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독자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을 둘러싸고 러일이 충돌하는 현실에서 두 나라 모두로부터 중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았다. 삼국제휴론은 동양을 단위로 하여 한청일 삼국의 연대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러일 사이에서 일본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자강론과 삼국제휴론이 완전히 상반된 관계였던 것은 아니다. 삼국제휴론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삼국의 연대를 통해 한국의 실력을 강화하고, 독립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강론과 삼국제휴론의 간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또한, 당시 『황성신문』은 인종적,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동양을 단위로 서양에 대응하려는 동양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sup>39)</sup> 그런데 『황성신문』은 동양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동양'이라는 정체성과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종의 이중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sup>40)</sup> 따라서 『황성신문』은 동양과 한국을 모두 보전할 수 있는 선택지인 삼국제휴론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삼국제휴론의 핵심적인 문제는 삼국제휴론의 맹주가 될 국가인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 삼국제휴론은 흔들릴 가능성이 컸다. 『황성신문』은 의화단 사건에 대규모 군대를 투입한 일본이 중국에서는 복건성을 가져가고, 그것도 부족하여 한국도 가지려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sup>41)</sup> 의화단 사건에서 일본이 서양열강과 연합하여 함께 동양국

39) 백동현,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동양주의 논리와 그 극복」, 『한국사상사학』 17, 2001, 528~529쪽.

40) 백동현은 이러한 이중정체성을 종족적 독자성과 유교라는 보편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이중적 구조'라고 보았다. 백동현,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동양주의 논리와 그 극복」, 534~535쪽.

41) 『황성신문』, 1900년 8월 8일자, 「韓淸危機」.

가인 청을 침략하는 모습을 보면서 『황성신문』은 일본에 대해 의심했다. 의화단 사건 이후부터 『황성신문』은 자강론과 삼국제휴론을 모두 외교론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1900년대 초반 한국 언론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화되어 있었다. 『제국신문』은 서양의 만국공법체제가 실제로 만국공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여겨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반면 『황성신문』은 서양의 만국공법체제가 만국공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며, 약육강식이 횡행한다고 보았다. 국제정치에 대한 한국 언론의 관점의 차이는 다양한 외교론으로 이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중심적인 외교론으로 생각했던 삼국제휴론은 한국 언론에 광범위하게 퍼진 공통분모였고, 그래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삼국제휴론 이외에도 비동맹외교론과 자강론 등 다양한 외교론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한국 언론을 구성하는 두 신문은 모두 삼국제휴론을 공유하고 있어서 외교론의 차이가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변동시키는 주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 Ⅲ. 영일동맹 체결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

#### 1. 제1차 영일동맹의 체결과 그 의미

1902년 1월 30일에 체결된 제1차 영일동맹은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사건이었다. 영일동맹에 의해 영국은 기존의 외교정책인 고립주의를 변경했으며,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에 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19세기 이래 영국의 목표는 식민지의 안정적인 보유,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유지, 해군력을 바탕으로 주요 통상로에 대한 제해권의 확보, 유럽대륙에서 패권국 등장의 저지 등에 있었다.<sup>42)</sup> 영국은 유럽에서 자신을 위협할만한 강대국이 등장하지 않도록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유럽의 삼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과 러불동맹(러시아, 프랑스)의 두 동맹에 참가하지 않고, 유럽에 대한 자유행동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sup>43)</sup> 이것이 외교정책으로는 고립외교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19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영국의 고립외교는 대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1899년에 시작되어 1902년에야 종식된 보어전쟁에서 영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으며,<sup>44)</sup> 다른 지역에 군사력을 전개할 여유를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00년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다.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을 기회로 삼아 만주를 점령했으며,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도 세력확대를 시도하여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를 위협했다. 영러대결이 유럽과 중동지역을 넘어 극동지역까지 확대되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고립외교의 기반이었던 해양패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독일은 1898년에 제1차 함대법을 제정하여 해군력을 증강하였다. 러불동맹의 해군력 또한 영국에 위협이 되었는데, 1901년 말에 영국의 해군성은 극동에 배치된 프랑스와 러시아의 해군력이 영국의 해군력을 앞지른다고 내각에 보고했다. 이에 영국정부는 러불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강대국과의 동맹을 고려하게 되었다.<sup>45)</sup>

42) 김태준, 「영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14쪽.

43) 김원수, 「영국의 해양 패권과 동아시아 외교 전략의 전환」, 68~71쪽.

44) 김원수, 「영국의 해양 패권과 동아시아 외교 전략의 전환」, 72쪽.

45) 김원수, 「영국의 해양 패권과 동아시아 외교 전략의 전환」, 73~79쪽.

이처럼 영국은 19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외교적 고립과 함께 해양패권이 위협받게 되면서 고립외교를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sup>46)</sup>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의 매력적인 파트너로 떠올랐다. 일본은 영국이 보어전쟁에서 군대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요청에 의해 의화단 사건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군사력을 입증했다. 또한, 근대적 해군을 보유하여 러불동맹의 해군력에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 해군성은 영일동맹이 체결되면 극동에서 영일동맹의 함대가 러불동맹의 함대보다 해군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고 평가했다. 즉, 영일동맹은 영국에게 극동지역을 관리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핵심지역으로 해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세계에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영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sup>47)</sup>

한편, 일본은 영일동맹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러시아에게 외교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 1894년에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청으로부터 승리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는 삼국간섭에 의해 외교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 결과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곧이어 아관파천이 발생하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삼국간섭과 같은 외교적 패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던 영국을 주목하

46) 1900년 즈음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첫 번째 상대는 독일이었다. 독일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함대법을 제정하여 영국을 위협하긴 했지만, 영국은 동맹을 맺으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결국 독일이 영국의 영독동맹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영국 정부는 영일동맹 노선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47) 영국은 영일동맹을 통해 극동지역의 해군을 축소하고, 독일의 도전이 예상되는 영국 본토 근해로 해군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김원수, 「영국의 해양 패권과 동아시아 외교 전략의 전환」, 79~80쪽.

였다.<sup>48)</sup>

1896년의 아관파천 이후 일본과 러시아는 베베르-고무라 각서(1896.5), 로바노프-아마가타 의정서(1896.6)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균형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1900년의 의화단 사건에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함으로써 러일관계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러시아에게 만주에서의 철수 혹은 러시아의 만주 점유와 일본의 한국 점유를 인정하는 만한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러불동맹에 의해 일본에 비해 우월한 해군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날 경우 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와 프랑스 함대가 일본을 상대할 것이었고, 일본의 해군력은 러불동맹의 해군력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은 러일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없었고, 이에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영국과 동맹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영일동맹론이 대두하였고, 1901년 6월에 강력한 영일동맹론자인 가쓰라 다로(桂太郞)가 수상이 되면서 일본정부는 영일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sup>49)</sup>

그리하여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1902년 1월 30일에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영일동맹은 영국이 고립외교노선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당대에 큰 화제거리였지만, 특히 외교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었다. 첫째로, 영일동맹은 러불동맹을 무력화하고, 삼국간섭이 재현되는 것을 차단했다. 영일동맹의 핵심내용은 ‘한 나라가 하나의 적국과 교전할 경우 동맹국은 중립을 지키고, 제3국이 적국에 가세할 경우에

48) 김태준, 「영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10~16쪽.

49) 김태준, 「영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17~18쪽. 한편, 러일협상을 통해 일본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러일협상론이 있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러일협상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내각은 영일동맹론이 우세하였고, 결국 일본은 러일협상과 영일동맹 중에서 영일동맹을 선택하였다.

동맹국도 참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단독으로 전쟁을 벌일 경우에는 영국이 참전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러불동맹의 상대국인 프랑스, 혹은 삼국간섭의 동참국인 독일을 끌어들이는 경우 영국이 일본 편에서 참전한다는 의미였다. 영일동맹에 의해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과의 전쟁을 우려하여 러일간의 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킨 것이었다.<sup>50)</sup>

둘째로,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은 미국과 문호개방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에 대항하는 정책공유, 즉 준동맹관계를 형성했다.<sup>51)</sup> 영일동맹은 전문(前文)에서 청과 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 그리고 청한 양국에서 상공업상의 기회균등을 목표로 함을 적시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만주점령은 만주시장을 독점하려는 것이었고, 이에 영국과 미국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은 상공업상의 기회균등, 곧 문호개방을 영일동맹의 중요한 목적으로 명시했는데, 미국도 만주의 문호개방을 지지하고 있었으므로 영일동맹은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긴밀해지도록 했다.

셋째로, 영일동맹은 러일간의 대립에서 일본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켰다. 1900년대 초반의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단독의 해군력은 일본의 해군력보다 부족했지만, 러시아와 프랑스의 해군력이 합쳐지면 일본의 해군력보다 우월했다. 그래서 영일동맹 이전에 일본은 러불동맹에 의존할 수 있는 러시아에 비해 외교적, 군사적으로 수세에 있었다. 그러나 영일동맹은 러시아가 러일간의 분쟁에 프랑스나 독일을 끌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 즉, 일본을 압박했던 러불동맹과 삼국협상의 재현 가능성은 사라졌고, 일본은 러시아와 단독으로 대결할 수 있었다. 영일동맹에 의해 러불동맹이 무력

50)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309쪽.

51) 김태준, 「영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19쪽.

화되면서 일본은 러일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환경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일동맹은 러일간의 대립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sup>52)</sup>

## 2. 영일동맹에 대한 한국 정계의 반응과 『황성신문』의 인식

영일동맹은 영국에서는 1902년 2월 11일에, 일본에서는 2월 12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2월 12일 아침에 한국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영일동맹 체결 소식을 전달했고, 이날 밤 영일동맹 체결은 고종에게 보고되었다.<sup>53)</sup> 주한 일본공사의 관찰에 따르면, 영일동맹 체결에 대해 한국 정계에서는 일본이 1894년~1895년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계에서는 각 파벌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일본파는 자신들의 세력확대를 도모했고, 러시아파는 영일동맹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다. 반면 미국파는 러일 모두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미국과 내각을 조직하려고 했고,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파는 외국의 도움 없이 내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은 원로들의 주장을 채택하여 2월 15일에 심상훈을 탁지대신으로, 신기선을 군부대신으로, 한규설을 법무대신으로 임명하였다. 독립파가 생각한 개혁의 내용은 화폐제도 개혁, 내장원의 폐지와 재정의 탁지부 일원화, 지방관의 부패 척결, 학교설립 확대, 경위원

52) 영일동맹이 러일전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태준, 「영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21~26쪽 참조.

5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 1902년 2월 12일, 「英日協約 韓譯文 外部大臣에의 수교 및 설명 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 1902년 2월 25일, 「日英協約 발표에 관한 이곳 政界의 상황」.

폐지 등이었다.<sup>54)</sup>

영일동맹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황성신문』의 2월 17일자 기사를 통해서였다. 이 『황성신문』의 영일동맹에 대한 첫 보도는 『한성신보』의 보도를 전재한 것이었다.<sup>55)</sup>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한성신보』는 영일동맹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 전달했으나, 『황성신문』의 판단은 달랐다. 『황성신문』은 2월 18일자 논설에서 영일동맹이 언급한 평화유지와 독립옹호라는 말은 거짓으로 인의(仁義)를 핑계댄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일동맹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인 영일동맹 편승론, 무대응론, 러시아 편승론을 모두 비판하고, 자수(自修)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6)</sup>

영일동맹에 대한 두 번째 논설에서도 『황성신문』은 영일동맹이 한국에 간섭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 간섭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매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의지하지 말고 자강(自強)의 방법을 취해야만 근심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sup>57)</sup> 『황성신문』의 영일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영일동맹 경제론이었고, 영일동맹에 맞서서 한국 스스로 개혁을 하는 자강(自強)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황성신문』의 이러한 태도는 영일동맹을 일본이 1894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침략, 간섭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개혁을 추진했던 당시 한국 정계의 반응과 유사한 것이었다.

『황성신문』은 영일동맹에 대해 자강으로 맞서자는 주장과 함께 구체

5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 1902년 2월 25일, 「日英協約 발표에 관한 이곳 政界의 상황. 본문에 사용한 '일본파', '러시아파', '미국파', '독립파' 등의 용어는 해당 문서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며, 이는 주한 일본공사의 시각에 따른 한국의 정치세력 분류임을 지적해 둔다.

55) 『황성신문』, 1902년 2월 17일자, 「日英協商」.

56) 『황성신문』, 1902년 2월 18일자, 「對日英協商亟宜恐懼自修」.

57) 『황성신문』, 1902년 2월 21일자, 「日英協商關係何如」.

적으로 개혁을 주장했다. 3월 4일 논설에서는 1902년도 예산을 비평하면서 학부예산이 적은 것을 비판하였고,<sup>58)</sup> 3월 5일에는 지방관의 부패를 비판하였으며,<sup>59)</sup> 3월 7일과 8일에는 백동화 문제를 지적하였다.<sup>60)</sup> 또한, 3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영일동맹을 맞이하여 인사혁신, 부패근절, 채용절약, 법률의 준수 등을 주장한 노상욱(盧相郁)의 상소문을 게재했다.<sup>61)</sup> 『황성신문』이 주장한 개혁의 내용은 한국 정계 내의 독립파가 주장한 영일동맹 대응론과 일치하고 있었다. 『황성신문』은 한국 정계에서 일어나는 영일동맹 경계론 및 개혁론에 호응하여, 영일동맹에 대한 비판과 한국의 내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영일동맹에 대한 『제국신문』의 인식과 변화

『제국신문』의 영일동맹에 대한 첫 보도는 1902년 2월 19일자 기사였는데, 이때에는 『한성신보』의 기사를 전재하는 방식이었고, 논평은 신지 않았다.<sup>62)</sup> 곧이어 2월 24일에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을 논설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는데, 이 글에서는 영일동맹이 청과 한국을 주인 없는 물건처럼 다룬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영일동맹을 영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고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sup>63)</sup> 다음날인 2월 25일자 논설에서는 영일동맹으로 인해 러일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측하였다. 러일전

58) 『황성신문』, 1902년 3월 4일자, 「論光武六年度預算表」.

59) 『황성신문』, 1902년 3월 5일자, 「辨內部奏本之風說」.

60) 『황성신문』, 1902년 3월 7일자, 「白銅禍弊」; 『황성신문』, 1902년 3월 8일자, 「白銅禍弊(前号續)」.

61) 『황성신문』, 1902년 3월 10일자, 「前主事盧相郁上政府書大略」; 『황성신문』, 1902년 3월 11일자, 「前主事盧相旭上政府書大略(續)」.

62) 『제국신문』, 1902년 2월 19일자, 「한성신보를 거흔즉 일영양국의 협상도약이」.

63) 『제국신문』, 1902년 2월 24일자, 「일영협상도약이라」.

쟁이 벌어지면 인종전쟁이 되기 쉬웠는데, 영일동맹이 성립되었으니 인종 전쟁의 구도에서 벗어나게 되어 일본이 불리한 상황이 없어졌으므로 전쟁이 더 가까워졌다는 주장이었다.<sup>64)</sup> 1902년 2월에는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모두 영일동맹에 대한 경계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치되었던 두 신문의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은 1902년 3월에 들어와서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영일동맹에 대한 원세개의 밀주(密奏)가 전달되자, 『황성신문』은 이를 크게 보도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들이 동맹을 맺은 목적은, 일본과 영국 양국이 오로지 러시아가 발호하고 날뛰는 것을 견제하며,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프랑스의 원조를 끊는 데 있다. (..) 저 양국의 기획(企劃)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 있을 뿐이다. 어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노력과 돈을 헛되이 낭비하려 들겠느냐. (..) 오늘날, 우리가 만약 치욕을 면하고 싶다면, 비록 하루라도 일찍 중국의 변법자강(變法自強)을 꾀하여 (..) 다른 나라들의 동맹은 조금이라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65)</sup>

여기에서 원세개는 영일동맹의 목적은 한청의 보전이 아니라 영일 양국의 이익에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은 영일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변법자강(變法自強)에 힘써서 군대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성신문』은 이러한 원세개의 주장이 『황성신문』의 주장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sup>66)</sup> 『황성신문』이 원세개의 주장에 찬성한 것은 원세개의 주장이 자강(自強)을 주장하는 『황성신문』의 노선과 일치하였기 때문으로

64) 『제국신문』, 1902년 2월 25일자, 「론 영일 약도라」.

65) 『황성신문』, 1902년 3월 14일자, 「讀袁直督世凱密奏有感」.

66) 『황성신문』, 1902년 3월 14일자, 「讀袁直督世凱密奏有感」.



보인다. 이후에도 『황성신문』은 1902년 내내 영일동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런데 『제국신문』은 『황성신문』에 원세개의 밀주가 게재된 지 10일 뒤에 이의가 있다면서 논설을 게재했다. 『제국신문』은 원세개가 갑오년 이전에는 한국의 독립을 방해했고, 청일전쟁 때에는 청군 파병을 요청했다가 이후 도망갔으며, 무술변법 때에는 광서제를 배신하고 서태후에게 붙었음을 일일이 열거하며 ‘간세한 인간’이라고 평했다. 『제국신문』은 원세개의 주장이 ‘옳지 않음은 아니나’라고 하여, 원세개의 영일동맹에 대한 해석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지만, 원세개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다.<sup>67)</sup> 『황성신문』이 원세개의 영일동맹 경계론에 공감했던 것과 달리 『제국신문』은 해당 논리를 낸 원세개를 강하게 비난함으로써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에서 균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1902년 3월의 단계에서 『제국신문』은 일정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 영일동맹에 대한 다른 인식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02년 4월 말에 급변했다. 『제국신문』은 4월 29일 논설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상해 어떤 신문이 영일동맹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였는데 그 신문이 지금에야 왔기에 번등하노니 그 글에 왈 (..) 동양이 태평을 보전하면 서양에도 유익할지니 (..) 비유하건대 각국의 관계가 쇠사슬 같아서 한두곳이라도 상한 곳이 있으면 모두 다 요동될지라. 지금 청국과 한국이 찍어 상한 곳이어늘 이 약조의 대지가 그 토지와 국권을 보전하는 데 있는 즉, 상한 곳을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라. (..) 지금 이 약조가 되었은즉 깊이 바라는 바는 기한이 정해진 5년을 헛되이 보내지 말며 (..) 외국인을 원수로 여겨 군함과 병정이나 확장하

67) 『제국신문』, 1902년 3월 24일자, 「원세개씨의밀주흔의견」.

여 남을 방비한다는 생각을 두지 말고 학교를 흥왕하여 교육을 위주하며, 상업과 공업을 흥왕하여 5년 안에 부강을 이루어야 하리로다.<sup>68)</sup>

이 기사에서는 영일동맹이 이루어진 이유를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청국이 문제가 있어 세계의 평화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영토와 국권을 보전하기 위해 영일동맹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일동맹이 정한 5년의 기한 내에 교육과 상공업을 위주로 개혁을 진행하여 국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지의 영일동맹에 세계 각국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국신문』의 설명은 앞서 『황성신문』이 가져왔던 원세개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상술하였듯이 원세개는 영일동맹은 영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와 재정을 확충할 것을 주장하였고, 『황성신문』은 이런 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 영일동맹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 의한 것이며, 한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었다. 그러므로 영일동맹에 대한 대응은 영일동맹의 체결기간인 5년 안에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개혁의 주된 방향은 군사력 확충이 아닌 교육과 상공업의 진흥에 있었다. 두 신문은 영일동맹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에 있어서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주장을 했던 것이다.

『제국신문』은 4월 29일자 기사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날에 아래와 같은 논설을 실었다.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일을 하려하면 다행이 되려니와 일을 안 하면 장래

---

68) 『제국신문』, 1902년 4월 29일자, 「영일 동맹에 대한 각국 의견」.

에 협한 일을 사람이 미리 측량하지 못할 일이다. (..) 외국에서 작성하고 행하는 일은 우리 정부나 백성이 홀로 앉아서 막을 수도 없고, 외국공론으로 되려는 것은 아니되어 본 적이 없나니, 세상공론이 아침의 명령을 저녁에 고치는 것과 같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하겠도다. 어제 논설폭에 외국공론을 들어볼진대, 어찌 하여야 될는지 짐작도 있으려니와 (..) (청국인) 남의 경위를 찾지 못하고 위력으로 남을 반대하니 전국인민 4억명이 다 군사가 되어도 만국경위를 반대하고야 어찌 능히 당하겠는가. 그러므로 작은 나라로도 남의 경위를 배워 나도 남과 같게 행세하여 가지고 그 사람네 경위로 시비를 분석하자고 할진대 설령 강한자가 경위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각국의 관계를 위하여 막아줄 터이니 이것이 참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라. (..) 이 5년 세월이 대한 영원성쇠의 고동이 될 것이다.<sup>69)</sup>

『제국신문』은 4월 30일의 논설에서 영일동맹이 확보해준 기간인 5년 안에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전날에 실었던 상해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제 논설폭에 외국공론을 들어볼진대’라고 서술한 부분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평화와 한청보전을 위해 영일동맹을 만든 것이라는 4월 29일자 기사의 주장을 『제국신문』이 국제사회의 공론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제국신문』은 국제공론의 힘이 매우 크다고 인식했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외국공론’ 혹은 ‘세상공론’이라 표현한 국제공론을 한국이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였다. 즉, 『제국신문』이 보기에 국제공론은 한국이라는 일개 국가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국제공론의 결정인 영일동맹은 한국이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제국신문』의 입장에서 영일동맹은 한국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69) 『제국신문』, 1902년 4월 30일자, 「오년이잠간이라」.

위의 인용문에서는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만국경위'를 지켜야 하며, 만약 강대국이 '경위'에 어긋나게 한국을 침략한다면 각국이 침략을 막아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sup>70)</sup> 즉, 한국이 만국공법체제의 원리에 따른다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제공론이 지켜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국신문』에게 영일동맹은 국제사회가 만국경위와 국제공론에 의해 한국을 지켜주려고 한 조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논리의 귀결은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일동맹에 편승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에 편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영일동맹 경계론에서 영일동맹 편승론으로 주장을 바꾸었던 것이다.

『제국신문』은 이러한 방향전환의 근거로 '상해 어떤 신문'을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신문이 지금에야 왔기에"라고 변명하고 있다.<sup>71)</sup> 이즈음 중국과 일본의 언론이 한국에 전달되는 속도를 고려한다면, 『제국신문』은 4월 말에야 갑자기 상해 언론을 근거로 하여 논조전환을 설명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제국신문』은 굳이 상해의 신문이 늦게 왔다고 변명했던 것이다.

『제국신문』이 참조한 상해의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상해의 신문이 『제국신문』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국신문』은 이미 3월의 원세개 밀주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점차 『황성신문』과 다르게 영일동맹을 해석할 조짐을 보이기는 했지만,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정황을 보건대, 『제국신문』은 상해신문의 기사를 읽고 나서도 한동안 태도를 정하지 않고 기

70) 여기서의 '경위'는 천경지위(天經地緯)의 줄임말로써, 이를 풀이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나 법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만국경위'나 '경위'는 만국공법의 원리를 의미하며, 서양 중심의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원리, 곧 만국공법체제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1) 『제국신문』, 1902년 4월 29일자, 「영일 동맹에 대한 각국 의견」.

다리고 있다가, 4월 말에 와서야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본격화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왜 『제국신문』은 4월말에 가서야 영일동맹에 대한 태도를 전환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영일동맹에 대한 미국 언론의 태도와 깊이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당시 『제국신문』을 설립한 주도세력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의 학생들이었다.<sup>72)</sup> 그렇기에 『제국신문』은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 논조에서도 친미적인 경향을 띠었다.<sup>73)</sup>

특히 영일동맹 즈음에 『제국신문』의 논설 집필자였던 이승만에 대해 신흥우는 이승만이 당시 감옥에서 『The Outlook』이라는 잡지를 눈을 감고 외울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74)</sup> 이 잡지는 뉴욕에서 발간되던 주간지였는데, 여기에서는 영일동맹이 중국과 한국을 보전하고, 문호개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화단 사건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미국의 정책과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sup>75)</sup> 또한, 당대 미국의 주요 언론이었던 『New York Times』는 영일동맹이 미국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보도하였다.<sup>76)</sup>

1900년대 초에는 미국 언론의 발행물이 한국에 도착하는데 6주에서 8

72) 『제국신문』 설립에 깊게 관여한 유영석, 이승만 등은 모두 배재학당 출신이었으며, 『제국신문』 스스로가 배재학당장 아펜젤러의 추모기사에서 『제국신문』의 기원이 배재학당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제국신문』, 1902년 6월 18일자, 「교소참상」.

73) 정종원, 「러일전쟁 이전 『제국신문』에 나타난 국제정세인식의 기반과 전개」, 48, 52~53, 56쪽.

74) 유영익, 『젊은 날의 이승만』,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65~69쪽.

75) 『The Outlook』, 1902년 2월 22일, 「England and Japan」.

76) 『New York Times』, 1902년 2월 12일 1면, 「A BRITISH-JAPANESE ALLIANCE CONCLUDED」; 『New York Times』, 1902년 2월 13일 1면, 「OPINION IN WASHINGTON」; 『New York Times』, 1902년 2월 14일 8면, 「FOR THE "OPEN DOOR."」.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sup>77)</sup> 따라서 『제국신문』의 집필진은 3월부터 영일동맹 경계론에 대해 점차 거리를 두다가, 4월 중순 이후에 『The Outlook』과 『New York Times』를 비롯한 미국언론의 영일동맹에 대한 우호적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영일동맹 편승론으로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제국신문』이 영일동맹 편승론으로 바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일동맹과 미국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영일동맹은 한국과 청의 상업상의 기회균등, 곧 문호개방을 조약에 적시하고 있었고, 만주의 문호개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1902년 6월에 주한 영국공사와 일본공사가 한국 문제는 영국과 일본이 협력하기로 협정을 맺을 때, 한국이 외채를 필요로 할 경우 영국, 일본 또는 미국의 금융시장을 이용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sup>78)</sup> 영일동맹은 한청의 독립과 문호개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었고, 미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제국신문』은 미국을 매우 우호적으로 보고 있었다. 『제국신문』은 과거에는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인을 학대했는데, 미국이 야만인을 가르쳐서 문명인과 동등하게 만드는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sup>79)</sup> 또한, 『제국신문』은 미국이 한국과 평등한 국가로서 조약을 체결했으며, 만약 청이 한국을 침략했어도 미국이 ‘공담’, 곧 국제공론에 호소하여 이를 막아주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sup>80)</sup> 또한, 『제국신문』은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왔다고 보

77) W.F.샌즈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비망록』, 집문당, 2018, 65쪽.

78) 현광호, 「영일동맹 이후 주한영국공사의 활동」, 『역사문화연구』 28, 2007, 6쪽.

79) 『제국신문』, 1902년 4월 22일 1면, 「통세계 유무식 비교」.

80) 『제국신문』, 1902년 2월 26일 1면, 「지금 일조에 형편이 갑오년 일청 형편과 같음이라」.

았다.<sup>81)</sup> 『제국신문』은 미국이 서양의 침략성과 전쟁을 억제해왔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국가로 보아 매우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국신문』은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영일동맹에 은연중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82)</sup> 『제국신문』의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영일동맹에 대한 지지와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국신문』은 1902년 6월의 주한 영일공사들의 협정에 대해, 한국문제를 영일 양국이 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 내용 자체는 한국에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였다.<sup>83)</sup>

한편, 영일동맹이 문호개방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제국신문』이 영일동맹을 지지한 한 원인이었다. 『제국신문』은 러시아가 한국을 점령하면 문호폐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제사회가 한청 양국의 보전을 원하며,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청의 보전을 천명한 영일동맹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sup>84)</sup> 즉,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문호개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을 크게 해석하여, 국제공론이 문호개방이라는 원칙을 위해 한청 양국의 독립을 보장하려하고, 그러한 국제공론을 실현하기 위해 영일동맹이 맺어졌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문호개방을 위해 국제공론이 움직였다고 『제국신문』이 인식한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의 본의가 천하만국을 일체로 열어서 버리는 지방과 물건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sup>85)</sup>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체제의 주요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문호개방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제

81) 『제국신문』, 1903년 1월 13일자, 「각국 정치상 문데」.

82) 『제국신문』, 1903년 1월 13일자, 「각국 정치상 문데」.

83) 『제국신문』, 1902년 6월 30일자, 「알슈업는일」.

84) 『제국신문』, 1903년 1월 13일자, 「각국 정치상 문데」.

85) 『제국신문』, 1902년 5월 6일자, 「농업 발달의 주의」.

국신문』은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제공론과 미국의 지지 속에 영일동맹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제국신문』이 이처럼 영일동맹을 문호개방 및 미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더 있다. 영일동맹이 체결된 직후인 1902년 4월에 러시아는 영일동맹의 압박에 의해 청과 만주철병조약을 맺고 만주에서 철병하기로 약속했고, 1902년 10월에 조약에 따른 1차 철병이 진행되었다. 1차 철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제국신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러시아가 스스로 물러나 만주의 관할권을 무양히 청국으로 돌려보낸 것은 가장 신기한 일이다. 이것은 실상은 영일연합과 미국이 힘써 만주를 공공지로 내어 놓고자 하는 효험을 인연함이라.<sup>86)</sup>

여기에서 『제국신문』은 러시아가 만주를 내어놓는 이유는 영일동맹과 미국이 만주를 ‘공공지’로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지’는 만주가 러시아의 독점시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공공지, 곧 문호개방된 영역이 된 것을 의미한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만주에 대한 문호개방 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국신문』은 미국 언론의 영향과 기존에 자신들이 가졌던 국제정세 인식에 기반하여 영일동맹 편승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영일동맹에 대한 해석에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황성신문』은 영일동맹을 기본적으로 영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며, 한국이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반대로

---

86) 『제국신문』, 1903년 1월 6일자, 「청국형편」.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한청의 독립과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제공론의 표출이며, 미국의 지지를 받는 동맹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해주는 동맹이며, 국제공론의 지지를 받는 동맹이라 해석하여 영일동맹 편승론을 주장했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한국을 지켜주는 동맹이라 생각하여 영일동맹의 존속 기간인 5년 안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7)</sup> 반면 『황성신문』은 일절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두 신문의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두 신문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 정계와의 연계성에 있었다. 『황성신문』의 주장이 당시 한국 정계 내에 있었던 독립파의 주장과 비슷하였고, 이는 『황성신문』의 주장이 한국 정계의 영일동맹 인식 및 대응과 연동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국신문』의 주장은 한국 정계와 연계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에 대한 해석에서, 그리고 영일동맹 이후 한국 정계와의 연계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IV. 한국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론의 전환

##### 1. 영일동맹 이후 국제정세와 한국 언론의 인식

영일동맹의 체결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는 영일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두 나라는 영

87) 『제국신문』, 1902년 7월 11일 1면, 「일흠을빚낼괴희」.

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며 러시아의 제안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러시아의 동맹국이었던 프랑스는 거듭된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러불선언을 발표했다. 1902년 3월 16일에 발표된 러불선언은 러불동맹의 적용 범위를 극동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길으로는 동아시아에 영일 대 러불이라는 양대 진영이 출현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러불선언은 아무런 실속이 없는 것이었다.<sup>88)</sup> 프랑스는 영국측에 러불선언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전달하여, 스스로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이에 러시아는 영일동맹의 압력에 밀려 1902년 4월에 러청만주철병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만주로부터 철병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1902년 6월에는 영일동맹의 영향이 한국에 직접 파급되기 시작했다. 1902년 6월 8일에 주한 영국공사와 일본공사는 한국의 모든 내무 및 외무 문제들을 영일이 협력하여 조정할 것이고, 한국정부가 외국인 고문을 더 이상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sup>89)</sup> 그러자 러시아는 이에 대항하여 주한 러시아공사, 프랑스공사, 독일공사를 모아서 1902년 6월 17일에 삼국이 한국에서 이권을 나눠갖는 협약을 체결하였다.<sup>90)</sup>

이처럼 영일동맹의 영향이 한국으로 파급되고 있었는데, 영국과 일본의 결합은 강한 반면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결합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적대관계와 두 나라의 영국과의 충돌회피 전략으로 인해 영일동맹에 맞설만한 결합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한국 언론에서도 곧 보도되었다. 『황성신문』은 1902년 3월 31일에 러불선언의 내용을 보도하였다.<sup>91)</sup> 『황성신문』은 청

88)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2007, 309~310쪽.

89) 현광호, 「영일동맹 이후 주한영국공사의 활동」, 6쪽.

90) 『황성신문』, 1902년 7월 9일자, 「俄法德締盟」.

91) 『황성신문』, 1902년 3월 31일자, 「日英協約에 對한 俄法通牒」.

의 광서성에서 일어난 반란이 러불선언에 의해 러불의 공동간섭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기사화했고,<sup>92)</sup> 러불선언에 의하여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양에 군함을 추가로 파견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sup>93)</sup> 『황성신문』은 러불선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하지는 않았지만, 러불선언을 상당한 실행력이 있는 외교적 선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2년 6월에 이르러 주한 영국공사와 일본공사의 협약이 보도되고,<sup>94)</sup> 7월 초에는 6월에 있었던 러불독 삼국의 한국 내 협약이 보도되었다.<sup>95)</sup> 『황성신문』은 영일동맹 이후 전개된 치열한 외교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대저 우리 한국은 한 귀퉁이의 영토로서 동남쪽에는 일본과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접하니 양국이 (우리나라를) 탐낸지가 오래되었다. (...) 아아, 저 영일동맹(日英之盟)과 러불독의 동맹(俄法德之盟)이 모두 한국을 위해 맺은 동맹이겠는가, 자기나라를 위해 맺은 동맹이겠는가. (...) 자강(自強)에 의지하고, 도리어 외국인에 의지하는 것을 꺼리는 데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sup>96)</sup>

위의 인용문에서 『황성신문』은 당시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영일동맹과 러불독의 삼국동맹 사이의 대결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대 동맹은 모두 한국이 아닌 열강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므로, 어느나라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강을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황성

92) 『황성신문』, 1902년 4월 10일자, 「美國과 廣西省叛亂」.

93) 『황성신문』, 1902년 4월 14일자, 「俄法の 東洋艦隊增派」.

94) 『황성신문』, 1902년 6월 19일자, 「在韓日英協同」.

95) 『황성신문』, 1902년 7월 9일자, 「俄法德締盟」.

96) 『황성신문』, 1902년 7월 10일자, 「論日本報所載俄法德締盟說」. ( )안의 내용은 필자.

신문』의 이러한 국제정세 인식은 당시 열강의 이합집산이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 점에서는 냉철한 것이었으나, 러시아가 프랑스 및 독일과 동맹을 맺어 영일동맹에 대항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상당히 어긋난 것이었다.

『황성신문』의 이러한 국제정세 인식은 당시 한국 정부의 국제정세 인식과 연동되고 있었다. 영일동맹 발표에 대해 고종은 충격을 받았다가, 러불선언이 발표되자 안정을 되찾았다. 고종은 영일동맹과 러불동맹이 서로 대등하게 한국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두 동맹 사이에서 중립을 추구하였다. 고종은 영일동맹과 러불동맹이라는 두 동맹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한국의 중립화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았으며, 일본공사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인을 고문으로 고빙하여 중립정책을 추진했다.<sup>97)</sup> 『황성신문』이 한국을 중심으로 영일동맹과 러불동맹(혹은 러불독동맹)이라는 양대 동맹이 출현했다고 인식한 것은 고종의 국제정세 인식과 유사한 것이었다. 고종이 『황성신문』 때문에 동아시아 상황을 양대 동맹의 출현으로 인식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황성신문』의 국제정세 인식은 고종이 자신의 국제정세 인식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종 및 한국 정부의 집권층과 『황성신문』의 영일동맹 이후의 국제정세 인식은 서로 유사한 것이었다.<sup>98)</sup>

그렇다면 『황성신문』과 달리 영일동맹을 만국공법체제와 국제공론의 표출로 이해하고 있었던 『제국신문』의 영일동맹 이후 국제정세 인식은 어떠한가. 『제국신문』은 주한 영국공사와 일본공사의 협약에 대해 한국을 배제한 것은 비판하였지만, 그 내용 자체는 한국에 좋은 것이라고 인식했

97) 현광호, 「대한제국의 중립정책과 중립파의 활동」, 67~70쪽.

98) 이러한 인식의 유사성이 후일 고종의 중립선언을 『황성신문』이 지지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종원, 「러일전쟁 개전 전후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399~405쪽.

다.<sup>99)</sup> 반면 영일동맹의 대척점에 있었던 러불선언과 러불독협약에 대해서는 영일동맹과 다르다고 보았다. 『제국신문』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영일동맹에 불만이 있어서 약조(러불선언)를 정하여 반대하려고 하다가, 국제사회가 영일동맹에 호응하는 것을 보고 영일동맹에 대항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았다.<sup>100)</sup> 또한, 『제국신문』은 영일동맹과 러불독협약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평시의 이익을 위한 러불독협약과 전쟁에서 동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영일동맹의 조약적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것이다.<sup>101)</sup> 그러면서 『제국신문』은 러불독협약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일은 러시아만 의심할뿐 아니라, 1870년 보불전쟁 이후로 양국이 항상 빙탄(氷炭)이 되어 서로 갈라져서 다니는 것이 한 두해 일이 아니거늘 지금 삼국의 합함은 결단코 못될 일이라. (...) 우리는 헤아리건대 이번 세 공사의 약조라 함은 장원한 경륜이 아니라, 잠시 대한 정권 상에 평균한 형세를 보전하자 함인 듯 한지라. 무슨 실력이 있으리오.<sup>102)</sup>

『제국신문』은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관계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추어 러불독 삼국의 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삼국의 협약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협력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일동맹과의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임시로 맺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과 러불독협약의 조약적 성격을 엄격히 분리하였고, 러불독협약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99) 『제국신문』, 1902년 6월 30일자, 「알슈업논일」.

100) 『제국신문』, 1902년 6월 7일자, 「일본이 대한을 □하게 계획하는 생책의 □양」.

101) 『제국신문』, 1902년 7월 21일자, 「아 범 덕 약도의설명」.

102) 『제국신문』, 1902년 7월 22일자, 「아 범 덕 약도의설명연속」.

평가하였다. 이는 한국을 둘러싼 양대 동맹이 출현한 것으로 보았던 『황성신문』과 달리 러불독협약이 가진 의미를 더 냉철하게 평가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당시 국제정세를 영일동맹과 러불동맹의 대결로 인식하였던 고종과 집권층의 국제정세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기도 했다.

## 2. 영일동맹 이후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과 대응

영일동맹의 체결 소식이 전달되기 전인 1902년 초 한국 언론의 중요한 이슈는 일본 이민법의 개정, 일명 '자유도한(自由渡韓)'이었다. 한국의 언론은 자유도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황성신문』은 일본인의 자유도한을 규정한 일본의 이민법 개정안을 '일본 이민법 개정안 전말(日本移民法改正案顛末)'이라는 제목으로 1902년 3월 20일부터 같은해 4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이나 연재했다.<sup>103)</sup>

『황성신문』은 일본인 자유도한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의 인삼 약탈, 해안의 어장 약탈, 울릉도 삼림의 약탈 등 누적되어 있는 일본인들의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일본인들은 이익만 되면 법을 어기면서 멋대로 굴고, 일본관리들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sup>104)</sup> 『황성신문』은 일본인들의 자유도한이 한국에 폐단과 해악만 끼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영일동맹 체결 이후 일본의 한국침략은 점점 더 노골화되었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의 한국정책이 영일동맹을 계기로 확정되었으며, 한국에 일본의 힘을 부식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5)</sup>

103) 『황성신문』, 1902년 3월 20일자, 「日本移民法改正案顛末」.

104) 『황성신문』, 1902년 1월 31일자, 「辨朝鮮新報辨妄之謬(續四)」.

10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 1902년 3월 15일, 「駐韓領事의 人選과 給與改善에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서, 일본에서 조선협회가 설립되었다. 『황성신문』은 일본에서 조선협회가 창설되자 조선협회의 목적이 한국의 물자를 빨아들이고, 농업, 어업, 광업, 상업, 공업 등의 여러 이익들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sup>106)</sup> 그리고 조선협회 창설이 이민 보호법을 개정(=자유도한)하고, 영일동맹을 체결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았다.<sup>107)</sup> 얼마 뒤 일본에서 조선협회에 이어 청한협회(淸韓協會)를 조직하자, 『황성신문』은 이 역시 일본의 한국침략을 위한 단체로 보았다. 그러면서 자유도한, 영일동맹, 조선협회, 청한협회 등은 모두 한국에 이주민을 보내 한국의 이익을 뽑아내어 한국의 부를 소진시키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sup>108)</sup> 『황성신문』은 자유도한, 영일동맹, 조선협회 및 청한협회를 일본의 연속적인 침략으로 이해한 것이었다.

『황성신문』은 이외에도 일본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경부선 철도 부설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경부선을 통해 삼남지역으로 침투하여 풍요로운 토지들을 점유할 것이라 우려하였다.<sup>109)</sup> 『황성신문』은 당시 울릉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본인들의 불법침입과 횡포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였다.<sup>110)</sup> 또한, 『황성신문』은 일본의 언론에서 한국의 우편, 해운, 어업권 등을 장악하였다고 평가한 것을 보도하고, 이는 일본의 식민론이라면서 일본의 책략을 경계해야 한다고 서술했다.<sup>111)</sup> 이러한 『황성신문』의 일련의 보도들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

---

관한 建議.

106) 『황성신문』, 1902년 3월 28일자, 「論日本人朝鮮協會主義」.

107) 『황성신문』, 1902년 3월 28일자, 「論日本人朝鮮協會主義」.

108) 『황성신문』, 1902년 4월 28일자, 「論日本人淸韓協會組織」.

109) 『황성신문』, 1903년 1월 8일자, 「地券事端」.

110) 『황성신문』, 1902년 5월 1일자, 「論鬱島報告事件」.

111) 『황성신문』, 1903년 3월 30일자, 「日本新聞週報에 記載한 바 移住民의 數로써 韓國에 吾國의 形勢를」.

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황성신문』은 일본이 영일 동맹을 기점으로 하여 연속하여 침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식민 지화를 포함한다는 우려까지 담고 있었던 것이다.

『제국신문』도 『황성신문』과 마찬가지로 1902년 연초부터 자유도한 문제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갔다. 『제국신문』은 1902년 2월 12일과 2월 13일의 연속 논설에서 일본 측이 추진하고 있었던 자유도한의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제국신문』은 내지잡거는 두 나라가 모두 개명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통상을 조계지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일본인은 문명인은 아니지만, 개화에 젖은 사람이어서 내지에 한국인과 함께 살게 되면 한국인이 줄어들 것이라 보았다. 그러면 미국에서 토종(아메리카 인디언)이 줄어들고 백인종 천지가 되었듯이,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멸망당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다.<sup>112)</sup> 이는 자유도한 조치가 곧 한반도에서 한국인을 멸종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한편, 영일동맹 체결 이후 일본의 한국침략은 점점 더 노골화되면서 조선협회가 설립되자, 『제국신문』은 조선협회에 대해 한국의 모든 이익을 점령하자는 주의라면서 조선협회의 창립을 비판했다.<sup>113)</sup>

『제국신문』은 일본이 자유도한과 조선협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침략을 가속화하자 영일동맹의 대의를 들어 일본의 침략을 제어하려고 했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국제공론의 찬동을 얻은 것은 한국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114)</sup> 이처럼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만국공법체제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영일동맹이 오히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야욕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sup>115)</sup> 『제국신문』이

112) 『제국신문』, 1902년 2월 12일자, 「폐일언호고 백성을 외국에 옮겨심으난」.

113) 『제국신문』, 1902년 4월 3일자, 「조선협회라」.

114) 『제국신문』, 1902년 6월 7일자, 「일본이 대한을 □하게 계획호는 생책의 □양」.

115) 『제국신문』, 1903년 1월 13일자, 「각국 정치상 문데」.



인식한 영일동맹의 목적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과 문호개방에 있었고, 이를 위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야욕도 제한하는 성격이 영일동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영일동맹을 전후한 시점에 계속되고 있었던 일본의 한국 침략은 『제국신문』이 인식한 영일동맹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제국신문』은 1902년 6월 7일 논설에서 영일동맹은 한청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추진하는 자유도한과 조선협회의 방침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방식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을 매섭게 비판했다.<sup>116)</sup> 『제국신문』은 국제사회가 영일동맹을 지지한다고 인식했고, 그 이유는 문호개방과 한청의 보전이라는 국제공론을 영일동맹이 실현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한국침략은 영일동맹 및 영일동맹을 지지해준 국제공론의 위반이 되었던 것이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과 자유도한-조선협회가 서로 모순된 것이라고 보아, 이 모순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한국침략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영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한 동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의 대외적인 명분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을 막으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 3. 영일동맹 이후 한국 언론의 외교론의 전환

영일동맹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한국 언론의 외교론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상술하였듯이 『제국신문』의 주된 외교론은 비동맹외교론이었고, 삼국제후론도 일부 병존하고 있었다. 비동맹외교론의 입장에서 『제국신문』은 일본과 러시아 둘 중 어느 쪽에라도 의존하면 두 나라의

116) 『제국신문』, 1902년 6월 7일자, 「일본이 대한을 □하게 계획하는 생책의 □양」.

속국이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국가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17)</sup>

그런데 『제국신문』이 영일동맹을 만국공법체제와 국제공론이 발현되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동맹으로 해석하면서 외교론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다음의 두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가-1

남을 믿는 마음을 먼저 버려야 할지니, 남을 믿지 말라는 것은 남을 다 의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외국이 나를 도와서 적국을 막아줄까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다 함이라. 사람을 이렇게 믿는 것은 장래 위태만 염려가 아니오, 당장 모든 사람의 시기와 분심을 격동하여 나를 없애려는 생각이 나는 법인 즉, 열 사람의 분을 일으켜놓고 한 친구의 정의로 능히 안연무사하겠는가. 이 영일조약에 세계 각국이 기뻐하는 뜻을 표하였은즉 각국이 좋게 여기는 뜻을 참량하여 행하면, 그 일이 나에게도 대리가 되겠고, 곁하여 그 기쁘게 여기는 각국이 다 나의 공변된 친구가 되려니와 만일 그렇지 않고 종시 내길로만 간다면 저 각국이 다 나의 적국이 될지라.<sup>118)</sup>

가-2

영국의 뜻은 상업을 확장함이 곧 권세라는 것이므로 토지를 취하는 데 있지 않고, 러시아의 형세를 막아 상권을 넓히는 데 있는데, 러시아는 다른 이익이 없고 다만 토지를 관할하는 권리에만 있기 때문에, 혹 체면을 돌아보지 않을 염려가 없지 않다. (...) 만일 한청양국이 각기 이 형편을 깨달아 동양을 유지코자 할진대, 일본이 구태여 먼 영국과 연맹하였을는지 모르겠거니와, 당연히

117) 『제국신문』, 1899년 3월 27일자, 「개화라 호는 말은 충속을 열고」.

118) 『제국신문』, 1902년 4월 30일자, 「오년이잠간이라」. 밑줄 강조는 필자가 한 것이다.

한청양국과 연맹하여 멀리 영국과 은연중에 상응하였을 것이니, 하늘 밑에 누가 엿보며, 한청의 권리를 누가 감히 털끝 만큼이라도 건드리리오.

일본도 또한 삼국을 보호하기만 뜻할지라, 다른 뜻이 생기지 못할 것이거늘, 종시 깨닫지 못하여 옷을 벗고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며 (...) 그 호랑이가 사람을 먹으면 기운이 자라서 사람을 또 상하려 할 터인고로 곧 자기네 일로 알고 벗어나게 하려하지만, 가르쳐서 종시 아니 들은즉 불가불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는바...<sup>119)</sup>

가-1 인용문에서 『제국신문』은 한 두 나라에 의지하여 나라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의지하는 나라들 이외의 다른 국가들을 적국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일동맹은 국제사회가 찬성을 표했으니, 여기에 합류하면 영일동맹을 찬성하는 국제사회의 호의를 얻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의지해서는 안되는 ‘한 두 외국’을 명확히 지칭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논설인 가-2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영리가 세계적으로 대결하는 가운데 영국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러시아는 영토확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더 위협적이라는 것이 『제국신문』의 인식이다. 그런데 한국과 청이 러시아의 위협성을 깨닫지 못하고 러시아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는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영일동맹이 나서서 한청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하고 있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러시아에 의존하려는 한국의 어리석은 결정을 막아서 러시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며, 한국이 듣지 않으니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sup>120)</sup>

119) 『제국신문』, 1902년 7월 21일자, 「아 범 덕 약도의설명」.

그러므로 『제국신문』이 영일동맹의 대척점에 두었던 ‘한 두 외국’은 곧 러시아 혹은 러불동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국신문』은 한국이 러시아에 의존하면, 러시아에 맞서는 영일동맹 및 영일동맹에 찬동하는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반대로 영일동맹에 합류한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친구가 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영일동맹으로 표현되는 만국공법체제의 흐름에 순응하여 외교를 펼쳐야 하며, 그런 흐름에서 동떨어진 러시아에 의존하지 말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러일 모두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려던 기존의 비동맹외교론이 아니며, 일본과의 동맹론이나 삼국제후론과도 결이 달랐다. 이러한 『제국신문』의 주장은 영일동맹을 국제사회의 연합행동, 곧 만국공법체제의 조치로 인식하고, 만국공법체제의 조치인 영일동맹에 편승하자는 주장이었다. 『제국신문』의 주장은 만국공법체제를 믿고, 만국공법체제에 의존하자는 ‘만국공법 외교론’이었던 것이다.

『제국신문』이 이처럼 비동맹외교론에서 만국공법 외교론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는 영일동맹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상술하였듯이,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을 만국공법체제가 실제로 작동하여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으로 발현된 만국공법체제의 힘이 러시아를 실제로 만주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보았다. 이로써 『제국신문』은 만국공법체제의 힘으로 한국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제국신문』에게 만국공법체제가 영일동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러일 사이의 갈등이 러시아와 만국공법체제의 대결로 전환된

120) 한국이 러시아에 의존하려고 하므로, 국제사회가 영일동맹이라는 형태로 이를 지지하려 한 것이라는 논리는 이후에도 『제국신문』에서 반복되었다. 『제국신문』, 1903년 2월 18일자, 「일야량국의 대한관계」.

것임을 의미했다. 이에 『제국신문』은 러일 사이에서의 비동맹외교론에서 벗어나, 영일동맹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이 만국공법체제의 적극 참여자가 되자는 '만국공법 외교론'으로 외교론을 전환했던 것이다.

한편, 가-2 인용문에는 삼국제휴론과 관련된 언급이 눈에 띈다. 여기에서 『제국신문』은 한청이 러시아의 위협성을 깨달아 일본과 연합하였다면, 구태여 먼 영국과 연합하지 않았을 것이며, 일본이 한청의 권리를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일본이 이미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삼국제휴론을 포기하고 영일동맹을 선택했으며, 이 때문에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더 취약해졌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후에도 『제국신문』은 일본이 전에는 한청과 연합하려 했지만, 지금은 권력이 확장되어 영국과 연합해서 러시아와 대적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위가 이전과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sup>121)</sup> 이는 일본이 한청과의 동맹이라는 삼국제휴론과 영국과의 동맹이라는 영일동맹이라는 대안들 중에서 영일동맹을 선택했고, 이전에 주창하던 삼국제휴론은 거둬들였다고 해석한 것이었다.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으로 인해 삼국제휴론이 효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을 계기로 비동맹외교론에서 만국공법 외교론으로 전환했고, 삼국제휴론은 이전보다 더욱 약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황성신문』의 외교론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황성신문』의 외교론은 상술한대로 자강론과 삼국제휴론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일동맹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의 중심적인 외교론으로 자강론이 부상하게 되었다.<sup>122)</sup> 반면 원래 『황성신문』의 중심적인 외교론이었던

121) 『제국신문』, 1903년 2월 18일자, 「일야량국의 대한관계」.

122) 『황성신문』, 1902년 2월 18일자, 「對日英協商亟宜恐懼自修」; 『황성신문』, 1902년 2월 21일자, 「日英協商關係何如」; 『황성신문』, 1902년 3월 14일자, 「讀

삼국제휴론은 침체되었다.

상술하였다시피 영일동맹 이후 일본의 침략적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황성신문』은 이러한 행위들을 연속침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연속침략은 일본을 맹주로 하는 삼국제휴론을 구상하던 『황성신문』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황성신문』에는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될 것을 생각했었지만,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서가 실렸다.<sup>123)</sup> 『황성신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었고, 이는 삼국제휴론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02년의 『황성신문』에는 삼국제휴론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논설이 거의 실리지 않았다. 『황성신문』이 이처럼 삼국제휴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원인은 상술한 일본의 침략이 강화된 데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영일동맹을 지적할 수 있다. 영일동맹의 성립은 일본이 러시아에 맞서는 동맹으로서 한국과 청이 아닌 영국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서양국가인 영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서양으로부터 동양을 지키기 위한 동양국가들의 연대라는 삼국제휴론의 근본전제가 흔들렸을 것이다. 영일동맹과 일본의 한국침략이 연이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황성신문』의 외교론은 자강론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기존의 중심적인 외교론이었던 삼국제휴론은 악화되었다.

영일동맹을 계기로 『황성신문』은 삼국제휴론을 자신의 주요 외교론에서 점차 배제하게 되었고, 자강론을 자신들의 중심적인 외교론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러일전쟁 직전에 『황성신문』의 중립자강의 외교론

---

袁直督世凱密奏有感」.

123) 『황성신문』, 1903년 2월 17일자, 「蕉下山人 寄書」.

과 한청동맹론으로 이어지게 된다.<sup>124)</sup> 당시 고종을 중심으로 한 집권층은 영일동맹 이후 한국 중립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sup>125)</sup> 이는 『황성신문』의 외교론의 흐름과 상당히 가까운 것이었다. 『황성신문』과 고종 정권의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유사성은 이후 1904년 1월에 한국 정부가 러일전쟁에 대한 중립을 선언하자 『황성신문』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sup>126)</sup>

## V. 결론

1900년대 초반에 한국 언론에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외교론이 존재했다. 『제국신문』은 비동맹외교론과 삼국제휴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황성신문』은 자강론과 삼국제휴론을 주장하였다. 한국 언론계는 이처럼 서로 다른 점도 있었으나, 삼국제휴론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등 일정한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영일동맹의 체결로 인해 러시아는 러일대결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은 영일동맹과 문호개방을 매개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국제정치적 지위를 크게 강화시켰다. 이러한 영일동맹의 의미에 대해 한국 언론은 각자의 국제정세 인식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였다. 『황성

124) 삼국제휴론은 1903년 중반에 잠시 『황성신문』에 등장했으나, 『황성신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립자강론으로 전환하였다. 정종원, 「러일전쟁 개전 전후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399~405쪽.

125) 현광호, 「대한제국의 중립정책과 중립파의 활동」, 67~72쪽.

126) 정종원, 「러일전쟁 개전 전후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399~405쪽.

신문』은 영일동맹이 영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며, 영일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군대와 재정을 확충하는 자강에 착수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제국신문』은 영일동맹이 청과 한국을 보전하고, 문호 개방을 원하는 만국공법체제와 국제공론에 의한 조치이며,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 차이는 영일동맹 이후 전개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외교론에서도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황성신문』은 영일동맹과 그에 맞선 러불동맹이라는 양대 동맹이 출현하여 한국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위기의식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영일동맹 이후 일본의 한국침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면서, 삼국제휴론보다 자강론을 더 내세우게 되었다. 반면 『제국신문』은 영일동맹 이후 만국공법체제와 국제공론의 흐름이 정해졌다고 판단하고, 한국이 러일 사이의 비동맹이 아니라, 영일동맹에 편승하는 만국공법 외교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영일동맹이라는 사건은 한국 언론 내부의 다양한 인식 틀에 의해 해석되었다. 그 결과 한국 언론의 두 신문은 서로 다르게 영일동맹이라는 사건을 인식했다. 『황성신문』은 영일동맹의 본질적인 의미를 간파하였지만, 영일동맹과 러불동맹의 대결로 국제정세를 해석하여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면이 있었다. 반면 『제국신문』은 영일동맹과 미국의 관계 및 러불선언의 취약성 등은 잘 파악했지만, 영일동맹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말았다.

한편, 영일동맹에 대한 인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외교론이 전환되었다. 『황성신문』은 자강론을 중심적인 외교론으로 삼았고, 이는 중립론으로 연결되었다. 『제국신문』은 만국공법 외교론을 중심으로 삼았고, 이는 영일동맹 편승론으로 연결되었다. 영일동맹은 한국 언론의 외교론에서 공통분모였던 삼국제휴론을 약화시키고, 한국 언론의 외교론을 분화시켰던 것이다.



1900년대 초반 한국 언론에는 국제사회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었고, 이것이 영일동맹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대응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900년대의 국제정세의 위기 속에서 한국 언론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시대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2023.07.09. 투고 / 2023.07.31. 심사완료 / 2023.08.09. 게재확정)

[Abstract]

## **The Korean Media's Conflicting View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iplomacy in the Anglo-Japanese Alliance**

Jung, Jong Won

The Anglo-Japanese Alliance signed in 1902 was not only an important event in world history because it marked the abandonment of isolationist diplomacy by Great Britain,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t that time, but also an important event in Korean history because it led to the Russo-Japanese War. In response to this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Korea, the Korean media developed its own interpretation and diplomatic theory of the Anglo-Japanese Alliance.

Before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re were different perspectives and diplomatic theories on the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Korean media. The *Cheguk Sinmun* (Imperial Post) believed that international law gover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dvocated non-aligned diplomacy and trilateralism as diplomatic theories. The *Hwangsŏng Sinmun* (Capital Gazette), on the other hand, believ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in a state of weakness and advocated self-reliance and trilateralism as diplomatic theories. Despite these differences, there was a certain consensus within the Korean media, with the three-power theory as the common denominator.

The Korean newspapers interpreted the Anglo-Japanese Alliance from their own point of view. The *Cheguk Sinmun* recognized that the Anglo-Japanese Alliance was an alliance for the benefit of Britain and Japan, and that to counter the Anglo-Japanese alliance Korea should become independent by developing its military and financial strength. The *Hwangsŏng Sinmun*, on the other hand, saw the Anglo-Japanese alliance as a measure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d politics aimed at preserving and opening up China and Korea and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The difference in the media's perception of the Anglo-Japanese Alliance led to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foreign policy theories that developed after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Hwangsŏng Sinmun* saw two alliances, the Anglo-Japanese Alliance and its opponent, the Russo-French alliance, clashing in Korea and advocated a theory of self-reliance rather than a theory of tri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the *Cheguk Sinmun* judged that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flow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had been set after the Anglo-Japanese Alliance and argued that Korea should use international law diplomacy in favor of the Anglo-Japanese Alliance rather than non-alignment with Russia.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early 1900s, the Korean press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times by exploring various alternatives to the Anglo-Japanese Alliance.

□ Keyword

Anglo-Japanese Alliance, Franco-Russian Alliance, *Cheguk Sinmun* (Impe-

rial Post), *Hwangšǒng Sinmun* (Capital Gazette), The theory of solidarity among the three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Non-Aligned Foreign Policy, Neutrality Theory

[참고문헌]

1. 원전

『제국신문』, 『황성신문』

『New York Times』, 『The Outlook』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W.F.샌즈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비망록』, 집문당, 2018.

2. 논저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유영익, 『젊은 날의 이승만』,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최덕규, 『대한제국 국제관계사 연구(1882~1910)』, 동북아역사재단, 2021.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2007.

현광호,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신서원, 2002.

현광호, 『대한제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선인, 2007.

구대열, 「러일전쟁」, 『한국사 42: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한국근현대사 연구』 1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김보연,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체결 원인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상수, 『영국의 고립청산외교: 영일동맹의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2.

김원수, 「영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전략의 형성, 1900-1904」, 『서양사학 연구』 28, 2013.

- 김원수, 「영국의 해양 패권과 동아시아 외교 전략의 전환」,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45, 2017.
- 김태준, 「영일동맹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29-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 백동현, 「대한제국기 언론에 나타난 동양주의 논리와 그 극복」, 『한국사상사학』 17, 한국사상사학회, 2001.
- 안정임, 「대한제국전기 언론계의 대외인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조재곤, 「한말 조선 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휴 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정종원, 「러일전쟁 이전 『제국신문』에 나타난 국제정세인식의 기반과 전개」, 『한국근현대사연구』 75, 2015.
- 정종원, 「러일전쟁 개전 전후 언론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 69, 한국사상사학회, 2021.
- 최덕규, 「러시아의 대한정책 (1879~1904)」,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 현광호, 「대한제국의 중립정책과 중립파의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2000.
- 현광호, 「대한제국기 집권층의 동북아정세 인식」, 『사학연구』 63, 2001.
- 현광호, 「영일동맹 이후 주한영국공사의 활동」, 『역사문화연구』 28, 2007.